

POLITICS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중앙 종속 벗어나야”...지방분권형 개헌론 ‘붐물’

북부소방서에 어린이집 개원 소방공무원·근로자 자녀 대상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4일 북부소방서에 ‘광주소방안전본부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소방 직장어린이집은 지난 2020년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고, 근로복지공단과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0월 완공됐다.

북부소방서 부지 내 마련된 어린이집은 부지면적 860㎡, 연면적 599.92㎡의 3층 규모 시설로 4개의 보육실을 비롯해 휴희실, 북카페, 햇살마당 등 최신 보육시설과 놀이공간을 갖추고 있다.

입소 대상은 소방안전본부 소속 직원 자녀와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녀이다. 소방안전본부 소속 직원은 소방공무원,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광주소방본부와 협약을 맺은 기업체(중소기업) 직원이 1순위이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2순위다. 0세부터 5세까지 최대 40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소방공무원과 맞벌이 가정의 다양한 근무환경을 고려해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연장보육(오후 7시 30분~오후 11시), 시간제보육, 휴일보육 등을 운영해 탄력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mailto:sky@gwangnam.co.kr)

전남도·근로복지공단·신보 1인 자영업 고용보험료 지원

전남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남지역 1인 자영업자는 약 26만8000명이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많아 가입자는 8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전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 환급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월 8190원에서 1만5210원까지 차등 지급, 연간 최대 18만2520원을 환급해준다.

또한 정부 지원분까지 포함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바라는 1인 자영업자는 4일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자영업종합지원센터)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여야 대권주자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완성” 민선자치 부활 30년...지방협의체들도 잇단 제기

지방자치 30년과 조기대선 정국을 맞아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여야 대권주자들과 시민단체, 지방자치협의체들 사이에서 붐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모든 권한과 권력을 틀어쥔 중앙에 종속돼 있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새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4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분권과 균형을 포함하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또 수도 규정을 헌법에 포함해 수도 이전 논의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간 정책 협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5일에는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주최하고 6개 시민단체(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국민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개헌추진법국민서명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이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헌법개정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배분하는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7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정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 19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아 지방자치체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여야 대권주자들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도 필요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이 완성돼야 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 개헌을 포함한 연합정치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기구를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달 27일 부

산일보사에서 메가시티 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 하며 지방자치 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눠 입법 재정 인사 권한을 부여하자는 이른바 ‘5개의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지난해 발표했다. 중앙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권역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자는 구상이다. 개헌 논의도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홍 충남지사는 지난 1일 개헌을 주장하며 “지방분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국가균형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커지면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자치분권·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한 주장도 줄을 잇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김동연TV)에 올린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3편’ 동영상에서 “강고해진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역자생력을 키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대기업·대학교·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3대 이전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 사법부 이전 등을 주장하며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균형발전은 특정 정권의 과제나 아닌 시대의 과제”라며 “모처럼 찾아온 개헌 기회에 핵심 있는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입력 동구청장,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요청 4일 오후 입력 동구청장이 국회 신정호 행정안전위원회장을 만나 지자체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와 고령사각기부제 개선 방안 등을 건의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전종덕 “정부 주도 입학지원금 필요”

지자체 마다 금액·방식 달라

전종덕 의원(비례)은 4일 “지자체 형편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입학지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교육의 첫 출발이 되는 입학지원금이 지자체에 따라 따라 대상과 지원금, 지원방식이 천차만별”이라며 “도시별이나 대도시나 차별받고 소외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맞아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입학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따르면 서울의 경우 서울시



와 25개 자치구가 협력, 지원하며, 초·중·고교 20만원, 중·고등학교 30만원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된다.

전남 초·중 입학지원금의 경우 화순, 광양 등은 20만원, 나주는 10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입학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소외되거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보편적 교육복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마은혁 합류해도 현재 8인체제 결론 전망

5대 3 이견 땀 변수...이르면 尹 탄핵심판 내주 선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합류 여부와 시기가 주목받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임명되더라도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다.

현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소장)이 취임했으나 11월 30일 정 기 소고로 그대로 진행했다. 당시 현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검찰 피의자 조사 당시 동석한 변호사에게 뒤에 앉으라고 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유 전 소장 없이 재판관 8명만으로 결론 내리고 선고했다.

없다며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대 3’으로 명백히 갈리는 등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파면·기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엔 현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르면 다음 주 14일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 평의를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7일 선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부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가 먼저 당시 동석한 변호사에게 뒤에 앉으라고 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유 전 소장 없이 재판관 8명만으로 결론 내리고 선고했다.

현재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현재는 취임 3일 뒤 정 기 소고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한쟁의 심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등에 대해 선고했다. 이때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 없이 각하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11차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그간 ‘신속 재판’을 강조해온 현재가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대 3’으로 명백히 갈리는 등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파면·기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엔 현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르면 다음 주 14일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 평의를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7일 선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부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가 먼저 당시 동석한 변호사에게 뒤에 앉으라고 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유 전 소장 없이 재판관 8명만으로 결론 내리고 선고했다.

현재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현재는 취임 3일 뒤 정 기 소고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한쟁의 심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등에 대해 선고했다. 이때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 없이 각하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11차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그간 ‘신속 재판’을 강조해온 현재가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이재중 예비후보 ‘아이 키우기 좋은 담양’ 공약발표

어린이 병원 유치·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등

이재중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사진)는 4일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담양’을 만들겠다”며 보육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맞벌이 가정 증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돌봄·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담양군 공공어린이 병원 유치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담양형 공공키즈카페 조성 △아간 보육 확대 △아이돌봄지원 강화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담양군 내 소아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담양군 공공어린이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미한 질환에도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부모들이 외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가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과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양형 공공키즈카페’를 조성해 실내 놀이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중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담양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출산·돌봄·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보육과 돌봄 지원을 확대해 담양군을 최고의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jnwnews1@damyang.co.kr

최화삼 예비후보 “담양군 청년정책 협의회 구성”

발대식 개최...유관기관과 지속적 소통 계획도

최화삼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사진) 선거캠프는 4일 오후 2시 선거사무실에서 담양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 대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담양군 청년정책 협의회 발대식을 가졌다.

최 예비후보는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내용 공유를 통해 사업의 유기적인 협업을 수행하는 기능의 일원으로서 ‘담양군 청년정책 협의회’ 구성 계획을 공개했다.

최화삼 예비후보는 “청년이 행복한 청년도시 담양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며 “추진하는 사업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청년정책의 신뢰성과 효과를 높이고, 유관기관과 지속적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예비후보는 가구당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의 계엄 여파로 군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역 상권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jnwnews1@damyang.co.kr